

첨단3지구 'AI 중심 창업단지' 개발 4차 산업혁명 이끈다

(인공지능)

광주시에 '인공지능기반 과학기술창업 단지', '국립심혈관질환센터' 등이 들어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첨단 3지구는 첨단 1·2단계와 연계한 연구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첨단3지구는 북구 오룡동·대촌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진원·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총면적 379만㎡를 2023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대상 면적 중 85%인

325만㎡는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돼 있다.

당초 첨단3지구는 2011년 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광주 미래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지만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물량 일부 부족이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 간 여러차례 협의를 통해 최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광주시, 대통령 공약사업 2023년까지 부지 조성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등 본격 추진

됐다. 그동안 시는 광주연구개발특구 활성화와 기반 확대를 위해 기업설립 지원을 통한 연구소기업 54곳(민선6기 44건) 설립과 유망기술의 발굴 및 기업이전 1310건, 이전기업 R&BD 자금지원 430억원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특구지정 후 신규 고용

8768명, 기술이전 275억원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전국에 5곳(광주, 대전, 부산, 대구, 전북)이 지정돼 있으나 대부분 개발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엔 본격 추진하는 광주연구개발

특구 첨단3지구는 사실상 최초 개발이라는 점에서 타 특구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첨단3지구엔 들어설 '인공지능(AI) 중심 창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연구·산업 응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 이전기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비롯한 연구소, 기업 등이 인접해 있어 R&D 및 창업·인재양성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

인다.

이와 함께 광주시 주력산업인 '의료용 생체소재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치과, 정형외과 등 기업들의 집적화 단지(10만506㎡)도 첨단3지구엔 구축될 예정이다. 시는 9월부터 주민공람공고와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의류 임가공 무역금지 북한에 영향 줄까

유엔 대북제재 결의 ... 주요 외화 수입원 장·단기작 타격될 듯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당초 미국의 초안보다는 완화됐지만 북한에 단기적·장기적으로 타격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 가운데 북한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최근 수년 사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떠오른 의류 임가공 무역을 금지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평가한다.

코트라(KOTRA)의 '2016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의류는 광물성 원료에 이은 북한의 2위 수출품목으로, 지난해 북한 전체 수출의 25.8%(7억 3천만 달러)를 차지했다. 특히 인건비가 저렴한 북한 측이 중국 업체의 주문을 받고 원자재를 들여와 의류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의 임가공 무역이 최근 급속히 성장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섬유 수출 규모를 연간 약 7억6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외화수입에서 섬유제품 수출액을 단순 삭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섬유 산업의 노동집약적 성격상 많은 수의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북·중 관계 전문가인 박종철 경성대 통일평화연구원 소장은 "최근 몇 년간 북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북한 전역에 봉제업이 활성화됐다"며 "(섬유제품 수출 금지)북한의 민생경제에 직격탄"이라고 말했다.

유류 제재의 경우 우선 대북 정유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함으로써 북한의 원유 정제능력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평안북도 피현군의 봉화화학공장과 함경북도 나진·선봉구역의 승리화학연합기업소 등의 정유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두 시설 모두 노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이번 제재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 유류공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결의에 따르면 유류를 북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달 제공 내역을 안보리 산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주요 내용

유엔 헌장 7장 41조 비군사적 조치 인용 (기존 대북 결의 제재와 동일)

- 유류 공급 제한
 - ▶ 정유 제품: 월 4백만 배럴, 내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
 - 원 북한에 공급되는 양의 55% 감축 전망
 - ▶ 원유: 광안산, 제천 시정의 현 수준 유지
 - 원 원유 공급량 400만 배럴로 추산
 - ▶ LNG, 콘덴세이트: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정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
- 제재 대상에 개인 1명, 단체 3개 추가
 - 개인: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단체인: 중앙군사위, 조지 지도부, 선전 선동부
 - 개인은 여행 금지, 단체는 자산 동결
- 해상 검색 차단
 - 금지 품목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해 기동국 동해에 공해상에서 검색 가능, 동해상에서 검색을 요청한 항공모함 이동 시켜 검색, 공해상에서 선박 대선박 이용 이전 금지
- 북한 해외 노동자 제한
 - 해안에서 북한 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
 - 기존 노동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 허용 안됨
-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 모든 직물·의류 원재료/부품은 수출 금지
-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 전면 금지
 - 기존 합작 사업체는 120일 내 폐쇄해야 함

연말뉴스

대북제재외에 통보해야 하며, 북한에 공급한 유류분이 목표치의 75%, 90%, 95%에 각각 도달하면 유엔 회원국들에 공지해야 한다.

그러나 비공식적 거래가 워낙 활성화된 북한의 대외교역 특성상 이같은 국제사회의 시도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이미 9차례 대북 결의를 거치며 제재에 내성을 키워왔고, 최근 들어서는 '자력자강', 특히 에너지 자립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민생에 영향이 큰 섬유 금수 등의 제재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반감과 체제 결속을 키우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말뉴스



새 대북제재 중국도 "찬성"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 표결이 시작되자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앞줄 가운데)가 손을 들어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이날 유류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새 결의는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유엔 '북핵 외교' 시선 집중

총회서 '한반도 구상' 기조연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미국 동부시간) 당초 예상보다 대폭 완화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과시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 유엔을 무대로 펼칠 '북핵 외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북핵 문제를 넘어 세계질서를 둘러싸고 4강(美·中·英·法)이 힘겨루기를 하는 신(新) 냉전적 구도 속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으로서의 진정한 의미의 국제외교 본(本)무대로 평가되는 유엔총

회 기조연설을 통해 가일층 '집대성'된 한반도 구상을 대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문 대통령은 대북 압박 강화라는 흐름을 견지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기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일' 대 '북·중·러' 식의 소모적 대립 구도를 피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실질적 협력을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인 미국과 우방인 일본과 함께 대북 압박의 수위를 최대한도로 끌어올리고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켜 대북 대화의 길을 터 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압박이나 대화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 신(新) 베를린 선언을 통해 제시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진전시킨 형태로 국제사회의 큰 물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이니셔티브'나 '프로세스'와 같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평화 노선을 통해 한국 전쟁을 겪었던 당사국으로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주변 강국의 대북 접근과는 차별화된 '주권적' 해결 방안을 제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간섭과 대결구도 이완에 나선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저작권 고민,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는
무려 128조원!!

저작권 분쟁 예방뿐만 아니라
산업적 활용을 도와 드립니다.

-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 변호사, 대학교수, 변리사 등 저작권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 상담·교육·법률자문·계약서 검토 등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지원팀 055-792-0223
-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 지역 기업에 밀착형 서비스 제공

⇒ 멘토링, 사업화, 등록 지원, 전시회 참가, 맞춤형 교육, 창조기업 육성, SW자산관리 컨설팅 등 저작권 관련 모든 서비스 제공 (문의 : 지역별 저작권서비스센터)

강원지역 033-650-3397	경기지역 031-8045-6757	대구지역 053-655-6864	대전지역 042-864-5055	부산지역 051-749-9166
전북지역 063-281-4145	전남지역 061-339-6965	제주지역 064-720-3752	충북지역 043-210-0852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서비스센터